

# 북한 핵문제와 UN

박 흥 순\*

## I. 서론

북한이 2006년 10월 14일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사태를 논의하고, 결의안 제1718호를 채택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동시에 일련의 제재(sanction) 조치를 취하였다. 안보리 결의안은 1990년대 초부터 거론되어 왔던 북한핵개발 관련 의혹을 공식적으로 “유엔문제화”(UN-ization)하고 유엔헌장 제7장 하에서 강제력을 가진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유엔의 역사상 그리고 한반도 문제접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유엔안보리 주도의 대북 ‘제재레짐’의 발동은 5개 상임이사국(P-5)을 포함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나, 또한 논의와 타협과정에서 갈등과 협력이 노출됨으로써 한반도문제와 국제정치의 역학을 반영하였다. 대북정책과 유엔제재를 둘러싼 주요국가의 입장차이 및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의 대응은 제재의 구체적 적용해석, 이행과정을 둘러싸고 계속적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국제평화의 유지 및 안전을 위한 유엔의 목적에 비추어, 대북한 유엔제재의 채택과 적용의 경과와 의미를 파악하고 당면 쟁점과 향후 전망을 해보기로 한다.

## II. 대북한 유엔제재 결의안 채택의 경과

대북한 유엔제재의 발단은 북한이 지난 7월 5일 동해상을 향하여 7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10월 3일 핵실험 예고에 이어 9일에는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비롯되었다.<sup>1)</sup> 안보리는 즉각 이러한 사태에 대처하여 7월 16일 결의안 제1695호, 10월 6일 의장성명, 14일 결의안 제1718호를 각각 채택함으로써 대북한 제재를 본격화하였다.<sup>2)</sup>

\* 전문대 국제·유엔학과 교수

## 1. 북한 미사일시험 발사와 안보리 결의 제1695호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후 안보리는 약 열흘간의 논의 끝에 결의문 1695호를 채택하였다. 전반적으로 결의문은 일련의 북한문제가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 평화 및 안정,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라는 유엔헌장의 주요 목적에 위반된다는 성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1)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비난 (2) 북한에 대한 모든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및 미사일 발사 유엔 선언 준수 요구 (3) 미사일 및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의 북한 이전 금지 및 북한으로부터의 구매 및 재정지원 금지를 회

원국에게 요구 (4)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및 9·19공동성명 이행촉구 등이다.

동 결의문은 선언적 성격의 의장성명이나 대언론성명보다 강력한 ‘결의문’의 형식을 갖춘 점, 그리고 미국 및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이사국가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보리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에서 “북한문제의 유엔화”라는 획기적인 진전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내용에서 헌장 제7장에 근거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구체적으로 대북한의 직접제재의 근거가 명백하지 않음으로써, 대북한 ‘제재’ 결의보다는 제재 전 단계로서의 ‘제재경고’ 성격을 갖고 있다.

## 2. 북한의 핵실험 예고와 안보리의 장 성명

북한은 돌연 10월 3일 외무성 발표를 통해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고립, 압살 책동이 극한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응하여 “핵 억제력 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인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핵실험을 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계획발표에 대하여 10월 6일 의장성명을 채택, 공식 발표하였다. 의장성명은 북한의 핵실험 계획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결의문 1695호의 모든 조항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그리고 2005년 베이징 「9·19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과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

북한(2차) 핵 및 미사일 관련 경과일지 및 유엔의 대응		
2002	11.14 12.12	미, 대북중유지원 중단 결정 북, 핵시설 재가동선언
2003	1.10 8.27	북, 두 번째 NPT 탈퇴선언 6자회담 (베이징) 개최
2005	2.10	북, 핵무기보유선언 및 6자회담 참가 중단 선언
	9.15	미,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 및 돈세탁발표, 미국기업, 금융기관과의 거래차제 촉구
	9.19	베이징 6자회담, “북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포기 등 6개항 공동성명 채택
	10.25	미, 자국내 8개 북한기업 자산 동결
2006	2.16	BDA(방코델타아시아) 대북 거래 중단 선언
	7.5	북, 미사일 시험발사
	7.16	결의안 제1695호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
	10.3	북외무성, 핵실험강행의사 발표
	10.6	의장성명 (북한의 핵실험 예고에 대한 우려표명)
	10.9	북, 핵실험 실시
	10.14	결의안 제1718호 (북한 핵실험관련 유엔제재부과)

행하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유엔헌장하의 책무에 부합하게 행동할 것을 천명함으로서 북한의 자세를 촉구하였다.

### 3. 북한 핵 실험과 안보리 결의 제1718호의 채택

안보리의 경고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 북한은 지하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조지 부시(Bush) 미국 대통령은 특별성명을 통하여, 북한의 핵실험을 “세계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도발적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중국, 한국, 러시아지도자들과 “유엔안보리가 즉각 대응이 있어야 한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유엔안보리는 9일 당일(현지시간) 오전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 핵 실험을 규탄하는 한편 대북제재 조치방안을 논의하였다. 논의의 쟁점은 제재의 범위와 수준, 현장 제7장 원용여부 그리고 외교적 해결방법의 포함 등 3가지였다. 미국이 준비한 초안은 모두 13개항으로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대북교역금지, 핵관련 의심선박의 북한 입·출항시 해상검문, 북한출입화물 검색 등과 유엔헌장 제7장의 원용 등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보다 강력한 초안을 제시하였는 바, 북한 선박, 항공기의 입·출항 및 이착륙금지, 핵 및 WMD 관련자 및 북한고위관리 여행제한, 북한산 물품수입금지, 제재위원회 신설 등을 포함하였다.

미·일의 입장을 반영한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이의를 제기하였

다. 10월 11일 중국은 군사제재를 포함하는 제7장의 포괄적원용에 반대하고 북한제재를 완화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2차 수정안은 북한선박에 대한 해상검문 및 해외북한자산 동결 등을 삭제하였다. 10월 12일에 마련된 제3차(최종) 수정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보다 반영하여 현장 제7장 41조에 의한 조치를 규정하였다. 결국 10월 14일 채택된 제1718호 결의안 최종안은 미·일의 초안보다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현장 7장 원용 등 안보리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었다.<sup>3)</sup>

### Ⅲ. 대북한 제재결의문 제1718호의 내용과 특징

결의안 제1718호는 비교적 포괄적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즉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대하여 6자 회담복귀, 9·19 공동 선언 이행, 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협정 준수를 권장(촉구)하였다. 나아가서,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행동하며, 제41조에 따라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1) 대북 핵관련 물자 및 사치품 수·출입 금지 (2) 제한적 금융제재-핵·미사일 관련 북한 자산 동결(인도적 물품은 제재대상에서 제외) (3) 여행제한-북미사일 관련자 입국 거부 (4) 북한화물 검색협력(촉구) (5) 제재위원회 설치 (6) 결의 후 30일 이내 각국 보고 의무화 (7) 북한 대응에 따른 추가 조치 등이 그것이다.<sup>4)</sup>

대북 결의문 제1718호가 가지고 있는 특

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결의문은 핵실험과 관련하여 유엔이 부과한 최초의 제재조치이며,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에서 유엔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제재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입장은 달랐지만, 상임이사국(P-5)들이 동시에 NPT(핵무기비확산) 레짐의 주요당사국으로서 타협을 통하여 공동의 입장을 보여 주었다.<sup>5)</sup>

둘째, 북한핵문제 등과 관련하여 최초로 헌장 7장(41조) 하에서 “제재”를 발동하였다.<sup>6)</sup> 미국과 일본은 원래 헌장 42조의 군사적제재를 포함하는 제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자, 타협안으로서 군사적 제재를 배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장 41조”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결의안 1695호와 달리, 제재의 성격이나 해석에 관하여 안보리의 결의안의 국제적 정당성, 합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제기되지 않았다. 미국으로서는 비록 헌장 42조는 배제하게 되었으나, 1695호 및 의장서명서에서 포함하지 못했던 제7장을 포함시킴으로서 향후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갖게 되었다.

셋째, 동 결의문은 소위 ‘맞춤식’ (혹은 표적) 제재(smart or targeted sanctions)의 내용과 성격을 갖고 있다.<sup>7)</sup> 즉, 전면적인 제재보다는 제재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부작용(side-effects)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선별적 제재라는 치밀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일정한 수준의 금융제재, 여행제한, 사치품수출금지 및 무역제재 부과 등을 통하여 북한정책 결정권자 및 지

도층에 대한 압박을 주로하고, 인도적 목적 등의 예외를 둬으로써 북한 일반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금융제재 등은 그 운용에 따라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또한 갖고 있다.

넷째, 동 결의문은 유엔제재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서 유엔주도보다는 개별 회원국들에 의한 참여와 협력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제재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가들의 적극적 의지와 역할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가령, 미국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sup>8)</sup> 등이 소위 ‘유사의지국가연대’ (Coalition of the Willing)로서 북한관련 화물의 검색등 유엔 제재 이행활동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다섯째, 제재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위하여 제재위원회(Sanctions Committee)설치로 체계적인 제재 이행 관리, 감시체제를 구축하였다.<sup>9)</sup> 결의안의 이행이 개별국가에 의해서 수행되는 점에 비추어 제재위원회는 개별국가들의 이행의무 수행의 감독 및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이다. 결의안의 해석과 적용, 점검에서 안보리와 함께 제재위원회의 권한과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IV. 대북한 제재의 이행 노력

결의안 1718호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결의안 채택 직후부터 미국과 일본주도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유엔 자체, 미국주도의 외교, 그리고 관



련국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 대북 제재위원회의 활동

결의안에 따라 제재위원회는 제재이행을 조율하고 총괄적인 실무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 즉, 결의안(12항)에 따라 대북한 제재결의 이행 감시 (a) 및 추가조치 필요성 판단 등 위반 국가에 대한 조치 (b), 대북 추가수출금지 물자, 장비, 기술 결정 (d), 대북 추가 금융제재 (e) 등의 결정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제재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해석권을 갖는다. 또한 관련국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결의위반사항이 발생한다고 의심될 경우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북한 제재위원회는 10월 23일 공식 출범하고, 피터 버리안(Peter Burian) 유엔주재 슬로바키아 대사가 의장을 담당하게 되었다. 제재위원회는 전문가회의에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 대상 품목 등에 관하여 잠정 합의하고 11월 1일 이를 확정했다. 제재대상품목은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 체제가 규정한 품목을 사실상 대부분 그대로 원용했다.<sup>10)</sup> 즉 핵관련 제품은 ‘핵 공급그룹’(NSG),<sup>11)</sup> 미사일 관련제품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sup>12)</sup>를 따르고, 그리고 생화학무기관련 제품에 관하여는 생화학무기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sup>13)</sup>의 품목을 원용하되, 그 대상품목을 다소 줄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다른 규제대상인 ‘사치품’의 품목은 사치품여부를 규정하고 그 품목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로 유엔회원국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 다른 결의 내용인 자금동결 및 여행제한 문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결의문에 의거 각국의 이행사항에 관하여 12월 중순까지 약 30여 개국이 제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제재위원회는 각국 보고서 검토 후 자체보고서를 작성하여 90일 이내, 즉 2007년 2월 13일까지 안보리에 보고하고, 안보리는 제재이행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하게 된다. 따라서 제재위원회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제기하는 사항 혹은 각국의 이행보고서에 기초하여 미진, 의심 혹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논의 혹은 결정을 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은 11월 15일 이미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를 받아온 12개 업체와 한 명의 개인을 포함하여 대북제재위원회에 금융제재 대상명단을 제출하였다.<sup>14)</sup>

## 2. 미국 주도에 의한 제재의 이행노력

미국의 기본적 입장은 북한 핵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유엔결의를 통하여 북한을 응징하고 나아가서 북한핵 및 미사일의 폐기를 주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 문제를 대아시아 및 세계전략의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하고 있다. 즉 (1) 한국 및 일본과 안보동맹 강화, (2) 안보리제재의 국제적 이행, (3) PSI 및 MD 구축, 금융제재, 핵무기 및 물질의 확산 원천을 규명해 책임지을 수 있는 방사능 탐지·검사 체제 구축 등 북한의 확산방지 보완대책, (4) NPT 등 전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 정비·강화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미

국은 대북한 제재결의안 채택을 관철시키고, 그 후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미국자체의 조치를 취함은 물론 회원국들이 협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미국자체의 조치로서는 1718호 제재결의안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던 일방적 제재(extraterritorial sanctions)<sup>15)</sup> 즉 미국행정부의 조치, 의회의 결의, 혹은 국내법에 입각한 단독 혹은 공동의 각종 제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한국전쟁 이래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제재, 무역제재, 경제봉쇄 등 경제제재를 부과하여 왔다.<sup>16)</sup> 다만, 1994년 미·북간 제네바합의 이후 2000년 6월 클린톤(Clinton) 행정부는 대북한 경제제재를 일부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 하에서 미국은 북한의 마약 거래와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 등에 관하여 국제적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05년 6월 WMD 확산방지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거 11개 북한기업의 미국내 자산동결 및 미 금융기관과의 거래 중단조치, 9월 미 재무부는 ‘애국법’(Patriot Act)에 의거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BDA)를 북한의 ‘자금세탁 우선우려’(primary money-laundering concern) 은행으로 지정하였고, 2006년 2월 BDA의 북한계좌(약 2,400만 불)를 동결한 바 있다.<sup>17)</sup> 전반적으로 미국은 ‘맞춤식 제재’를 강화하여, 특히 북한의 취약성이 강하고 효용성이 큰 금융제재 방안을 집중적으로 수립, 적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 핵 실험이후 고강도의 제재이행을 추진하면서, 우방국 및 관심국가의 협력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 공

조를 강화하고 있다. 결의안에 의하여 각종 대북 유엔조치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조치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고, 정당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확대되게 되었다.<sup>18)</sup> 가령 결의안 채택직후, 콘돌리자 라이스(Rice) 미국무장관은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 하고, 3개국 외교장관 등과 함께 대북제재의 이행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관건이 된다고 보고, PSI에 의한 선박검색, 차단 등의 활동을 위하여 한국등의 공식참여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한국의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은 한국정부가 원한다면 배에 직접 승선하지 않고도 지나가는 배를 향해 방사능을 탐지할 수 있는 원격방사능물질 탐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sup>19)</sup> 미국이 PSI에 집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 선박검색 등을 개별국가의 자발적인 협조에 맡기면 그 강제가 어렵고, 헛점(loop-hole)이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적 협력체에 의해서 실시하자는 것이다. 둘째, 핵무기나 물질등이 ‘알 카에다’ 등과 연계되어 테러 집단에게 흘러가는 등의 확산이나 통제 불가능으로 미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염려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금융 등 각종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바, 가령 BDA은행의 북한계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자금세탁과 위조지폐 유통 등 불법행위여부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6자회담과는 별도로 북·미 접촉을 통하여 금융제재실무그룹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

다.<sup>20)</sup> 2005년 9월 이후 미국이 BDA 조치에 이어 전 세계 금융기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후, 각국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 중지 조치를 취한 상태이다. 현재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싱가포르 등의 20여 개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를 중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북한비확산법’(North Korean Non-Proliferation) 제정을 통하여 이란 및 시리아에 추가하여,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다.<sup>21)</sup> 미국과 북한의 금융거래나 교역실적은 미미한 편이나,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한국과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의 동참요구는 북한경제 및 정권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 3. 북한의 대응과 6자회담 개최 논의

북한은 유엔제재의 대상국가로서 안보리 결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미국의 사주에 의한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제재의 ‘부당성’ 지적과 함께 추가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북한외무성은 안보리 결의 사흘 후인 10월 17일 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안이 “미국이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였다. 북한은 “그 누구든지 유엔결의를 내 들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끝만큼이라도 침해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의안에 따른 제재의 요구사항인 핵 폐기,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수락 등 즉각적인 이행 준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유엔의 강력한 제재발동 이후

북한은 6자회담 복귀 등 협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태도변화는 중국의 설득, 그리고 ‘핵보유국’으로서 유리한 협상입지를 갖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탕좌쉬안 특사에게 “6자회담에 복귀할테니 가까운 시일안에 금융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그 후 중국의 중재로 북한과 미국의 6자회담 대표는 10월 31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였고, 그 후 12월 18일 경의 ‘베이징’ 회담 재개가 결정되었다. 11월 말의 북·미간 회동에서 미국은 북한측에게 2008년 말까지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영변핵시설 가동중단, IAEA사찰수용, 핵시설신고 등 ‘초기 이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여 경제지원, 중유 등 에너지지원, 경제제재해제, 평화체제논의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도되었다.<sup>22)</sup> 그러나 북한은 일단 6자회담에 복귀하되 유엔제재 해제 및 BDA 자금동결해제를 회담진행의 조건으로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의 입장은 6자회담 재개와 핵 폐기과정에서 단계별로 “보상조치”를 하되, “기본적으로 6자회담을 통한 대화와 유엔결의 1718을 통한 제재를 병행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구체적 반응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6자회담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현 제재는 지속 혹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V. 대북한 제재 이행의 주요쟁점

현재 유엔제재 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쟁점이 대두되었다. 첫째, PSI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관련 등 한국의 협조문제이다. 미국은 제재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한국의 PSI 공식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한국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23)</sup> 핵실험 직후 한국 정부는 유엔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일관되게 표명하였지만, 유엔결의안 채택이후 실제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24)</sup> 따라서 한국정부는 PSI 참여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거나 선박검색의 경우 남북간에 직접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PSI 공식참여를 유보한 상태이다. 그 대신 2005년 남북간에 체결, 발효된 ‘남북 해운협력합의서’를 원용할 예정이다.<sup>25)</sup>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사업 및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하여, 미국은 WMD개발을 위한 “대북전용”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가령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인적자원에 대한 장기적 투자’로 이해하는 반면, 금강산 사업은 “북한권부에 돈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sup>26)</sup>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 사업들은 유엔결의와 무관하며, 다만 “운용방식이 유엔안보리결의나 국제사회의 요구와 조화되고 부합되도록 필요한 부분을 조정,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sup>27)</sup> 더구나 한국이 연간 40~50만 톤의 식량과 35만 톤의 비료공급, 그리고 각종 민간단체지원금 등의 규모에 비추어, 미국이 자금전용을 이유로 한국에 대하여 전반적인 남북한 교류 및 자본·금융거래를 축소 혹은 중지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제재이행문제에서 커다란 논란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국의 적극적 협력의 문제이다. 중국과 북한과의 특수한 정치적 및 경제적

관계에 비추어, 중국의 충분한 협력이 없는 경우 유엔제재이행의 실효성이 미약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연간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80~90만 톤의 원유, 연간 20~30만 톤의 식량을 공급하는 등 북한 대외무역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북한의 제1 교역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유엔제재의 정당성 확보, 특히 북한의 반응에 따른 제재의 강화 혹은 추가제재의 채택을 위해서도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유엔결의안의 도출과정이나 제재이행에 있어서 대한반도 정책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8)</sup> 비록 군사제재에는 단호히 반대했지만, 중국의 유엔결의안에 대한 지지는 북한 핵문제의 유엔화 혹은 유엔제재에 반대해온 입장으로부터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은 상임이사국과 북한의 우방이라는 양 측면에서 절묘한 ‘실리적,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령, 표면적으로 북한에 대한 엄격한 제재부과를 반대하면서도 실제로 일련의 경제압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일정한 수준에서 미국과 동조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결정적인 경제조치(석유공급, 생활필수품 공급중단 등)는 유보함으로써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극단적인’ 제재에는 반대하는 양면적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특사의 방북이나 미·북·중 3자의 협의를 통한 중재 및 외교적 역할을 통하여 북한의 고립이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면서 또한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sup>29)</sup> 따라서 중국의 태도에 따라 제재의 효율성이 크게 영향을 받

을 전망이다.

셋째, 안보리가 추가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의 문제이다. 그것은 두 가지 경우인바, 하나는 안보리가 현 1718호 결의안 하에서 제재수준 및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안보리 자체의 논의나 제재위원회의 결정 또는 해석을 통하여 북한에 대하여 기존 결의안 내용의 확대적용을 시도하거나 미국, 일본 등이 자체의 제재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안보리가 북한의 의무이행을 근거로 제재를 강화하는 추가적인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가령 금융제재 등의 강화 혹은 의무이행기간을 명시한 결의안을 논의 혹은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유엔결의안 내용들이 ‘일반조항’(general clause)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 내용 해석이나 추가결의 채택여부에 관하여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진영간의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제재의 결과로 초래될지 모르는 사태에 대한 대비문제이다.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바, 하나는 유엔제재 및 미국 등의 제재가 지속 혹은 강화, 한국의 대북 경협이나 지원중단, 또는 미국 등의 PSI에 따른 해상검색에 대하여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sup>30)</sup> 북한의 반발은 추가 미사일 시험 발사 혹은 추가 핵실험이나, 국지적인 무력위협 혹은 실제도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등이 유엔의 추가 제재, 가령 해상봉쇄, 제한적 군사제재등 현장 42조에 의한 군사적 응징을 추진하거나, 만약 유엔안보리의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미국 단독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 유엔의 군사제재에 다시 반발하는 경우 북한의 남한 혹은 일본에 대한 국지적 혹은 전면적 도발조치가 가능성에 비

추어, 한반도 전체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충분한 역지력이나 방위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 다른 가능성은 유엔제재의 압박이 본격화됨으로써, 북한정권의 내부 정세 불안으로 야기될 국면, 가령 북한 자체의 정권붕괴, 교체, 혹은 변환 등의 사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경제난 가중 혹은 정치적 이유로 북한 주민의 대량이탈 등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리고 이 사태가 중국, 러시아,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결국 유엔제재의 강화나 그 결과가 야기하는 사태에 대한 대비를 어떠한 수준으로 할 것이냐가 제기된다.

다섯째, 미국 및 한국의 국내정치적 변수의 영향문제이다. 200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그 여파로 럼즈펠드(Rumsfeld) 국방장관이 교체되는 등 미국의 국내정치적 변화가 대두하였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기조와 대북 강경정책이 민주당이 강조하는 대화와 협상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정책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 의회가 갖는 대통령의 외교정책수행에 대한 견제역할, 그리고 가속화될 부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 등이 그러한 변화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 금지라는 ‘레드라인’을 이미 넘었고, 북한의 사태가 이란등 WMD 개발의혹국가에 주는 시사점에 비추어 현 부시행정부 하에서 근본적인 정책수정을 기대하기 힘들다. 2008년 대통령 선거이후, 북한 핵 및 제재 이행문제는 결국 미국의 대북한 전략 그리고 세계전략의 차원에서 설정해야할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의 경우에도

2007년 대선결과 여하에 따라 대북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이에 따라 제재문제, 나아가서 대북정책이 새롭게 논의될지도 모른다.

끝으로 유엔사무총장의 중재역할의 문제이다. 유엔사무총장 주도의 중재노력은 유엔헌장 제99조에서 제시한 사무총장의 ‘정치적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이며 임무라고 할 수 있다.<sup>31)</sup>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는 그동안 주로 미국, 중국, 북한 등 관련국들이 유엔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점에서, 유엔이나 사무총장 자체의 역할 여지는 크지 않았다. 한국인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취임을 계기로 사무총장의 중재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반 사무총장도 취임 후 한반도 전담 특사 임명이나 그 스스로의 북한 방문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가 유엔사무총장의 권한과 역량의 시험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중재의 공식개입 전 주도면밀한 준비를 거쳐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중국 등의 이해관계 특히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신임 사무총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만한 여건은 현재로서 아직 부족하다. 반 사무총장의 중재시도가 임기 초기부터 실패하는 경우 자칫 사무총장직의 권위와 역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또한 전통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당사자인 경우 관여를 자제하는 것이 유엔의 관례이기도 하다.

## VI. 결론 : 대북한 제재의 의미와 전망

안보리결의안 제1718호가 지난 10월 14일 채택된 이후 제재의 실제이행은 아직 본

격화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의 복잡성과 북한의 강경한 입장 그리고 미국의 단호한 태도에 비추어, 안보리 제재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등 그 전개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제도의 핵심인 헌장 제7장 하에서 미국과 중국 등 P-5간의 타협과 협력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발동한 것 그 자체가 북한 핵문제 해결과 유엔의 역할 측면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된 것이 사실이다. 대북한 결의의 채택과 제재부과는 북한핵문제 및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유엔화라는 점에서 매우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결의문 1695호와 1718호는 1950년 안보리의 대북한 군사 제재(집단안보의 발동) 및 경제제재 이후 최초의 “구속력”있는 대북한 제재의 발동이다. 유엔안보리가 헌장 제 7장이 규정한 바의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작동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도 및 다자외교수단으로서 유엔의 유용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역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북한 핵실험의 불법성과 이에 대한 제재를 부과를 통하여 핵확산금지규범(NPT)을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였다. 나아가서 “학습효과”라는 점에서 ‘불량국가’(rogue state)로 일컬어지는 국가들, 이라크, 이란 등에 대하여 핵 ‘도미노’를 경고하는 시금석이라는 시사점을 갖고 있다.

또한 유엔제재의 부과는 북한 핵문제의 유엔화를 주도한 미국 등에게 보다 다양한 외교적 지렛대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독자적인 경제제재가 국제제재로 확대되고, PSI 등이 다자적 제재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될 국제법적 명분과 정당성을 갖게 되었

다. 따라서 종전 6자회담에 의지해온 부시 행정부가 유엔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활용함으로써, “당근과 채찍”의 더욱 강력하고 재량성있는 외교와 제재의 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북한 제재가 유엔결의안이 추구하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아직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북한 문제의 유엔화는 사안의 국제화, 다자화를 통하여 그 해결도 보다 복잡한 양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는 공교롭게도 4대 강대국 등이 NPT레짐, 유엔제재레짐, 그리고 한반도 6자회담의 직접 당사국인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적으로 연결되어있다. 현재 경제 및 군사제재를 위한 유엔 자체의 역량이 미비한 제도적, 구조적 제약속에서 대북 제재의 발동 및 이행에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지해야만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정치적 합의, 그리고 제재 효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변국가 특히 한국, 중국 등의 적극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역학상 과연 그러한 국제적공조와 협력이 이루어질 것인지 불확실하다. 6자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이 시도되고 있지만, 결정적인 정치·외교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재이행의 범위, 강도및 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북한체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재의 목적 달성에 제약을 갖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고립된 체제와 생활방식 등에 비추어 경제제재의 효용성은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결의안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제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정권에 대한 압박이 이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면서도 실제로는 북한핵심부의 정책변화를 초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제재가 지속 혹은 강화는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상당한 압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1990년도 이후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유엔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유엔제재(sanction)는 평화조성(peacemaking) 등 현장에 명시된 바 조치는 물론, ‘평화유지활동’(PKO) 등과 함께 주요한 유엔의 수단으로 대두하였다. 그동안 부과된 일련의 유엔제재, 특히 이라크(1990~2003)나 리비아(1992~2003)의 경우에서처럼, 중대한 국제규범의 위반이 있는 경우, 일단 발동된 제재의 ‘해제’ 문제는 부과 이상으로 안보리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강대국들의 예민성과 국제적 ‘비확산’에 대한 의지, 그리고 불량국가로서의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대북제재가 쉽게 해제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병행하여 유엔제재는 북한의 태도와 정책변화를 압박하는 주요한 국제사회의 수단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다만,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성과여부는 당분간 불투명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유엔의 제재가 가져올 효과와 북한의 대응, 그리고 이를 둘러싼 회원국의 협력과 갈등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관찰과 대비를 계속 해야 할 것이다. **외교**

- 1)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탈퇴선언이후 야기된 제 1차 북한 핵위기 및 미사일 관련 유엔의 조치는 4.8 대언론성명 (북한의 NPT 탈퇴 결정에 대한 우려 표명), 5.11 결의안 제825호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대한 재고 촉구), 1994. 3.31 의장성명 (북한의 IAEA 사찰 수락 촉구), 5.30 의장성명 (IAEA 사찰이행을 위한 북-IAEA 간 협의 촉구), 11.4 의장성명 (북-미간 제네바합의 환영), 1998. 9.14 대언론성명 (북한미사일 (대포동1호) 발사에 대한 유감 표명)등이다.
- 2) 북한 미사일 발사의 배경 및 한국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는 김강령, “북한 미사일 실험발사의 파장,” *외교* 제79호 (2006.10) pp.95-105
- 3)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 수정과정” (세계일보 2006.10.14)
- 4) 1993년 북한핵문제의 발단 이래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의 가능성은 간헐적으로 거론되어 왔다. 줄고, “UN제재와 북한 핵문제의 적용전망,” 충북대사회과학연구소/국제기구포럼 공동세미나 발표논문집, 「다자주의와 한국의 교」 (2004.10.22) (충북대학교)
- 5) ‘유엔제재레짐’의 근거는 유엔헌장 제7장(39-50조)에 의거하며,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 평화파기, 그리고 침략행위”와 관련하여 적법한 조치를 안내, 권고,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헌장 39조) 비군사적 조치는 경제적, 외교적 집단제재(헌장 41조)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치이며, 만약 이것이 불충분할 경우 군사적 제재 (military sanction), 그리고 나아가서 전면적인 군사력의 사용인 집단안보 (collective security) (헌장 42조)를 동원하게 된다. 유엔제재는 다자제재인 점에서 미국등 개별국가에 의한 일방제재와 구별된다. 유엔제재 사례에 관한 이론 및 주요사례의 논의는 David Cortright & George A. Lopez, eds., *Sanctions and The Search for Security: Challenges to UN Action* (Lynne Rienner, Boulder, CO, 2002), “Are Sanctions Meant to Work?- The Politics of Creating and Implementing Sanctions Through the United Nations,” *Global Governance* (Vol.9, No.1, Oct.-Dec. 2003) pp.503-518
- 6)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 의해 발동, 적용중인 제재사례 (국가, 제재부과년도, 제재내용)는 다음과 같다. 이들 대부분은 주로 내전에 의한 분쟁지역이며, 알 카에다 테러집단으로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http://www.un.org/Docs/sc/committees/Intro.htm>)
  - \*소말리아-1992 무기금수, \*씨에라 리온-1997년 무기금수, 반정부군 여행금지, (석유및 다이아몬드는 금수는 해제), \*콩고민주공화국- 2003년 부분적 무기금수, 2005년 전면적 무기금수, 제재대상자 여행제한 및 자산동결, \*라이베리아- 2001년 무기금수, 제재대상자 여행금지및 자산동결, 다이아몬드 수출금지, 2003년 목재수출금지, \*수단- 2004년 무기금수, 군 지도자등에 대한 여행금지및 해외자산동결 (석유수출은 중국의 반대로 제외), \*코트디부와르- 2004년 무기금수, 제재대상자 여행금지및 자산동결, 다이아몬드 수출금지, \*르완다- 1994년 무기금수, \*알 카에다및 탈레반- 2001년 9월 전 세계 알카에다 구성원에게 무기금수및 자산동결
- 7) 표적제재 개념의 등장과 이라크사태에서의 적용, 발전에 관하여는 임성남, “유엔제재의 효용성과 윤리성: 대 이라크 제재사례와 Smart Sanctions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박수길 편, *21세기 유엔과 한국* (오름, 2002) pp.109-137,
- 8) PSI는 대량살상무기관련 의혹이 있는 화물을 적재한 항공기 및 선박을 탐색하고 관련화물 및 불법무기 압류를 목적으로 2003년 6월 미국주도로 발족한 협력체이다. 현재 미국, 러시아, 일본등 약 75개국이 참여중이다. PSI에는 현재8단계의 활동항목이 있으며, PSI 정식참여 단계는 해상에서 의심스러운 배를 차단(interdiction)하기위해 정지명령을 하고, 거부하면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검색을 한다.
- 9) 제재위원회의 구성은 의장국 1인 및 부의장국 2인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대표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다. 유엔제재위원회의 사례와 개혁논의에 관하여는 David Cortright and George A. Lopez, “Reforming Sanctions,” pp. 167-179, Peter van Walsum, “The Iraq Sanctions Committee,” pp. 181-193, David M. Malone, ed., *The Security Council* (Lynne Rienner, Bolder, CO, 2004).
- 10) “유엔제제위, 품목 잠정합의” (동아일보 2006.10.28)
- 11) 핵공급그룹(NSG)은 원자력 전용품목 및 산업용등 이중용도품목이 핵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핵기술 수출통제를 위해 1978년 수립된 핵확산 통제체제로서 현재 45개국이 가입하였다.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1972년 수립된 ‘쟁거위원회’ (ZC)는 NPT 당사국만이 참가가 가능하다. 전략물자수출통제체로서는 1996년부터 가동된 바세나르체제 (Wassenaar Arrangement)가 있다.
- 12)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대량살상무기의 중요한



- 반수단인 미사일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1987년 미국 주 도로 서방선진 7개국에 수립한 수출통제체제이다. 그 통제대상은 사정거리 300km, 탑재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체제 및 무인비행체 (Category I)와 미사일 기술개발, 생산설비, 재료 (Category II)이다.
- 13) 호주그룹(AG)은 생물 및 화학무기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무기들의 원료물질 및 이중용도 생산시설, 장비,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위한 비공식협의체로서 1985년 호주의 주도로 발족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가입하지 않았다.
  - 14) 제재조치를 받는 북한기업은 조선광업무역회사, 조선련 봉총회사, 단천상업은행 등 11개이고, 개인은 스위스 공업물자 거래업체인 코하스 (Kohas)의 야콥 슈타이거 사장이다. “미국, 유엔 대북 제재위 명단 제출” (자유아시아방송, 2006.11.6)
  - 15) 미국의 일방체제의 역사적 발전개요에 관하여는 Michael Mastanduno, “Extraterritorial Sanctions: Managing “Hyper-Unilateralism” in US Foreign Policy,” Stewart Patrick & Shepard Forman, eds., *Multilateralism & US Foreign Policy* (Lynne Rienner, Boulder, CO, 2002) pp.295-322 미국의 주요 적용사례는 Richard N. Haass, ed., *Economic Sanctions and American Diplomacy*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ew York, 1998) 참조
  - 16) 1950년 한국 전쟁 발발과 더불어 수출 관리법, 적성국 교역법, 대외원조법등에 의해 제재가 시행중이다. 또한 1987년 KAL기 폭파사건으로 미 국무부 테러지원국가로 분류, 금수국가 명단에 포함되어있다.
  - 17) BDA관련 미국의 조치에 관하여는 조병제, “미국의 대북 금융조치 및 북한 위폐문제의 현황과 전망,” 외교 제 77호 (2006.4) pp.36-43
  - 18) 북한 미사일 발사직후 미국의 대북제재강화에 관하여는 김성한, “미국의 대북압박정책과 북미관계” 외교 제 79호 (2006.10) pp. 15-24
  - 19) 이러한 제안은 새롭게 구축되는 국제컨테이너검색네트워크(ICSN)의 일환으로 보인다. “방사능 물질탐지장비 미, 부산항에 설치제안,” (중앙일보 2006.10.30)
  - 20) “미, 북 돈세탁-위폐 물증 찾은 듯” (동아일보 2006.11.9)
  - 21) 기존의 ‘이란·시리아’ 법에 북한을 추가하는 안이 상·하 양원에서 각각 채택, 2006년 10월 13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 22) “6자 회담 18~19일쯤 재개” (조선일보, 2006.12.11)
  - 23) 라이스 장관은 한국방문시 반기문 외교장관에게 “북한 핵의 국외이전은 미국 혼자 힘으로 못 막는다. 한국의 협조가 없으면 방법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왜 ‘한국PSI 참여’ 집착하니” (중앙일보 2006.10.21)
  - 24) 한국은 핵 사태와 관련, 이른 바 4대 방향, 즉 북한 핵 불용인, 안보리 결의안의 이행 및 독자적 조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부정적 영향배제노력, 그리고 대화를 통한 해결모색을 표방하였다.
  - 25) “‘해상검문’ 남북해운합의서 적용?” (세계일보 2006.10.17)
  - 26) “개성 공단의 프로젝트 이해안기-힐 차관보 일문일답” (동아일보 2006.10.18)
  - 27) 유엔결의안에 따라 취하기로 결정 혹은 이행을 표명한 조치는 현재 \* WMD, 재래식 무기, 사치품의 공급. 판매, 이전 금지, \* 제재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및 자산활용 방지, \*북한 출입화물 검색 \* 제재위원회 지정 북한 인사 및 가족의 출입, 체류금지등이다. “안보리 결의 따라 부분적 조정검토,” (중앙일보 2006.10.19)
  - 28) 중국의교부는 10월 16일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결의안 초안 협상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29) 일부 중국계 은행들 북한의 중국위폐 제조,유통을 근거로 북한자산을 동결하거나 거래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짐으로서 중국의 제한적 경제 제재 동참이 가시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다시 재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WSJ., AP 보도- 중국 4대은행, 대북 금융거래 중단” (중앙일보 2006.10.21)
  - 30) 미국은 10월 3일 중국, 러시아 등 12개국과 함께 북한과 이란 등의 핵물질이 과격,테러집단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글로벌핵테러방지구상’ (GICNT,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을 발족시켰다. PSI의 기본운용방식을 원용하게 될 GICNT는 PSI와 함께 북한에 대한 압력 수단이 될 수 있다. ‘글로벌 핵테러방지구상’ 출범” (조선일보 2006.10.30)
  - 31) 헌장 제 99조: “사무총장은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정하는 어떠한 사항에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